

與, 개혁입법 완수 의지... “국민이 부여한 180석의 책임감”

입법독주 비판엔 “개혁엔 고통따라”

이낙연 “공수처 제도화...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9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민들도 역사 발전의 도당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기겠

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때 과감히 결단할 것이다. 국민 뜻을 충실히 받들어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위한 법을 오늘 처리한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무런 불안없이 반대와 정쟁을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를 반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 다 채워도 민생개혁 입법은 요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터는 야당의 주어진 권한 행사나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책임감을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양해를 구하자면 민주당의 역사 발전과 180석을 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메시지를 주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어제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20년 대한민국 종교인들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검찰의 반성, 개혁 외치고 있다”며 “검찰은 종교인들의 질타를 빼

아고 듣고 과잉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검찰 톨살롱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에게 수백만원 톨살롱 접대 받아도 뇌물도, 접대도 아니다”며 기소조차 안 하는 검찰의 도덕적해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검찰개혁을 통해 ‘떡감’에 이은 ‘톨살롱 검찰’, ‘정치 검찰’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톨살롱 접대 검사 불기소

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재수사를

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 강행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소집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새로 열리는 임시회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에도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에 부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되나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개최를 반대하지 않아서 여순특별법 공청회는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철희 향토역사학자는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 기관인 군대에서 촉발된 사건이

고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우리 유족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대사에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수·순천을 넘어 전남, 전북, 서부경남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한을 풀어주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함께 성안하고 공동발의를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희재 의원(여수 을)이 참석했고, 유족들을 대표하여 이규중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유족대표들의 진술기회와 참관했던 의원 3명에게도 발언기회를 부여해주었다.

유족대표들은 최초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감격해 하였다. 행안위 의원들이 여순사건의 의미와 희생자·유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야당 의원들에게 1:1로 직접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달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행안위 제1소위는 공청회결과를 참조하여 법안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지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표출되었으므로 향후 법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법사위 통과

조사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조와 조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조사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진상규명 범위에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